

한국리서치 월간리포트

여론속의

여輿론論

2018. 04

한국리서치 월간리포트

- 한국리서치가 기획하고 운영하는 자체 조사입니다.
- 매월 정해진 기간에 시행하는 정기조사입니다.
- 특정 의제를 다각도로 조사하고 분석하는 심층 여론조사입니다.
여론의 현상과 함께 흐름을 추적하고, 여론 속의 민심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 현안조사-국정지표-기획조사 등으로 구성합니다.
- 현안조사는 한국리서치 전문 연구원이 기획하고 분석하며, 개별적인 문의에 대해 상시적으로 소통합니다.
- 국정지표는 해당 조사결과와 함께 추이를 제시합니다.
- 기획조사는 분야별 외부 전문가와 함께 기획하고 분석 및 보도를 함으로써, 여론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에디터들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

운영책임

박종선 수석부장

전화 | 02-3014-0085
e-mail | have21c@hrc.co.kr

기획조사

정한울 여론분석 전문위원

전화 | 02-3014-1057
e-mail | hw.jeong@hrc.co.kr

국정지표

오승호 차장

전화 | 02-3014-0167
e-mail | shoh@hrc.co.kr

목 차

CONTENTS _____

주요 조사결과	4
1-1. 현안 조사: 워라밸과 근로시간 단축	8
1-2. 현안 조사: 가족에 대한 인식	17
2. 국정 지표	25
3. 조사 개요	34

2018년 4월 주요 조사결과

1-1

현안조사 : 워라밸과 근로시간 단축

- 2,069시간. 2016년 한 해 한국 피고용자의 평균 노동시간입니다. 'OECD 2017 고용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노동시간은 2위로, 멕시코 다음으로 길다고 합니다. 과거에 비해 노동시간이 감소했다고는 하나, 여전히 한국이 장시간 근로 사회인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 국민들 역시 '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많은 편(60%)'으로, '나 또는 가족을 위한 시간'은 '적은 편(68%)'로 평가합니다.
- 최근 우리사회의 화두 중 하나가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입니다. 직장에서의 성취와 보상에 우선순위를 두었던 기성세대와 달리 일과 개인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젊은 직장인을 '워라밸 세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향은 이번 조사에서도 확인됩니다. 조사 결과 일과 삶 중 일이 더 중요하다는 비중은 9%에 불과한 반면, 내 삶이 더 중요하다는 응답은 46%입니다. 특히 삶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은 젊은 연령층에서 더욱 강하게 나타나는데요, 2030세대, 미혼자는 과반이 내 삶이 더 중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 매마침 올해 7월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됩니다.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2004년 주 5일제를 도입한지 14년이 지난 지금 또 한 번의 노동시간 변화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이 일과 삶의 균형을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지만 제도 시행을 앞두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 한국리서치는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여론을 확인하였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국민들의 57%는 찬성하는 입장으로 반대(27%) 입장을 크게 상회합니다.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긍정적 여론이 우세한 가운데 그에 따른 변화에 대해서는 기대와 우려가 공존합니다. 불필요한 야근 관행 감소(51%), 업무 생산성 향상(53%), 가족과 보내는 시간 증가(56%) 등의 긍정적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절반 이상인 가운데 '임금이 줄어들 것'에 대한 우려가 73%에 이릅니다. 실질적인 근로시간은 줄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도 53%나 됩니다.
- 그래서일까요? 현재보다 덜 일하고 덜 벌겠다는 취업자는 15%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은 지금만큼 일하거나(52%), 일하는 시간을 늘리고 돈을 더 벌겠다(33%)고 응답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젊은 세대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특히 가구소득이 낮은 계층에서 더 일하고 더 벌겠다는 응답이 더 높습니다. 현재의 소득을 고려할 때 '덜 일하고 덜 버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 녹록하지 않다는 것이 지금의 여론입니다. 근로시간 단축, 일과 삶의 균형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소득 감소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적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현안조사 : 가족에 대한 인식

-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 국민들의 가족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고 새로운 가족에 대한 태도를 확인하였습니다.
- 우리 국민 2명 중 1명은 결혼을 반드시 할 필요는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또한, 결혼을 하지 않고도 남녀가 같이 살수 있다는 응답이 61%로 과반 이상이었고, 결혼하지 않아도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다는 응답도 40%에 이르렀습니다. 남녀가 함께 살고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은 ‘결혼’을 전제해야 한다는 전통적인 인식에서 동거와 아이 출산, 양육에 꼭 결혼이 전제조건은 아니라는 인식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다음은 자녀가 반드시 있어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응답자의 63%만이 자녀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응답해 과거에 비해 ‘자녀는 필수’라는 인식에 변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출산이 화두가 되고 있는 요즘임에도 자녀는 하나인 것보다 둘 이상이 낫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응답이 73%로 높게 나왔고, 모든 연령대에서 그렇다는 응답이 더 높았습니다. 자녀의 성별에 관해서는 딸이 하나는 있어야 한다는 의견은 44%인 반면, 아들이 하나는 있어야 한다는 의견은 23%에 불과하여 남아선호사상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모계 쪽(36%)’을 ‘부계 쪽(24%)’보다 더 자주 만난다는 응답 결과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결혼을 하거나 자녀가 있으면 사회적 성취가 어려워지는가에 대해 물은 결과, ‘결혼’에 대해서는 47%, 자녀에 대해서는 40%가 그렇다고 응답했으나, 응답 결과의 성별차이가 컸습니다. 여성의 64%가 결혼을 하면 사회적 성취가 어려워진다고 응답한 반면, 남성은 30%에 불과했습니다. 자녀와 사회적 성취에 관한 질문에서도 여성의 ‘그렇다’는 응답이 남성에 비해 두 배 이상 높게 응답되어 성별 인식차이가 뚜렷했습니다.
- 다음은 새로운 가족 형태에 대해 물었습니다. 내 자녀가 외국인과 결혼을 한다면 찬성하는지 물은 결과 10명 중 7명 이상이 찬성하였고, 자녀 입양과 관련해서는 10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했습니다. 또한 결혼을 하지 않고 자녀를 가지는 것에 대해 물은 결과 10명 중 2명이 찬성하였고, 결혼 후 의도적으로 자녀를 낳지 않는 딩크족에 대해서도 10명 중 3명이 찬성하였습니다. 특히, 딩크족에 대해서는 20대는 ‘찬성한다’는 응답이 75%인 반면, 60세 이상은 12%에 불과하여 세대별 인식 차이가 크게 나타났습니다.

국정지표 :

대통령 국정운영과 리더십평가, 경제/안보인식, 주요 정책 진단

- 문재인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73%로 전월(74%)과 비슷하였습니다. 1월 부터 3월까지 이어 온 상승세를 유지하지는 못했습니다. 연령대별로 2040세대에서는 지난달 대비 상승한 반면, 40대, 50대, 60세 이상에서는 하락하였습니다. 리더십 평가에서는 6가지 항목 중 공직 인사에 대한 긍정평가가 지난달 대비 하락하였습니다.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인사 논란이 반영된 결과로 이해됩니다.
- 경제인식 지수가 전달 -27에서 -23으로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그러나 40대와 생산/기능/노무 종사자에서는 오히려 감소하여 계층마다 체감하는 정도가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 국가안보 지수는 +16에서 +29로 대폭 상승하였습니다. 올해 1월에 -14로 시작하여 2월에 -4, 3월에 +16, 4월에 +29로 가파르게 상승 중입니다. 최근 남북 해빙모드가 반영된 결과로 이해됩니다. 지난달 대비 60세 이상, 대구/경북에서의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컸습니다.
- 이번 달에는 문재인 정부 1주년을 전후로 주요 10개 정책에 대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습니다. 정책별로 중요도와 실행평가를 각각 물어본 결과, 중요도와 긍정평가가 모두 높은 '사회 안전 대책'을 제외하고, 중요도가 높은 정책은 긍정평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중요도가 낮은 정책은 긍정평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였습니다. 특히 중요성은 높지만 긍정평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저출산, 고령화 대책', '일자리 및 고용 정책', '환경 정책'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응답문항의 빈도는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응답 사례 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여론속의
여輿論論

CHAPTER



현안조사
워라벨과 근로시간 단축

01

현안조사

1) 워라밸과 근로시간 단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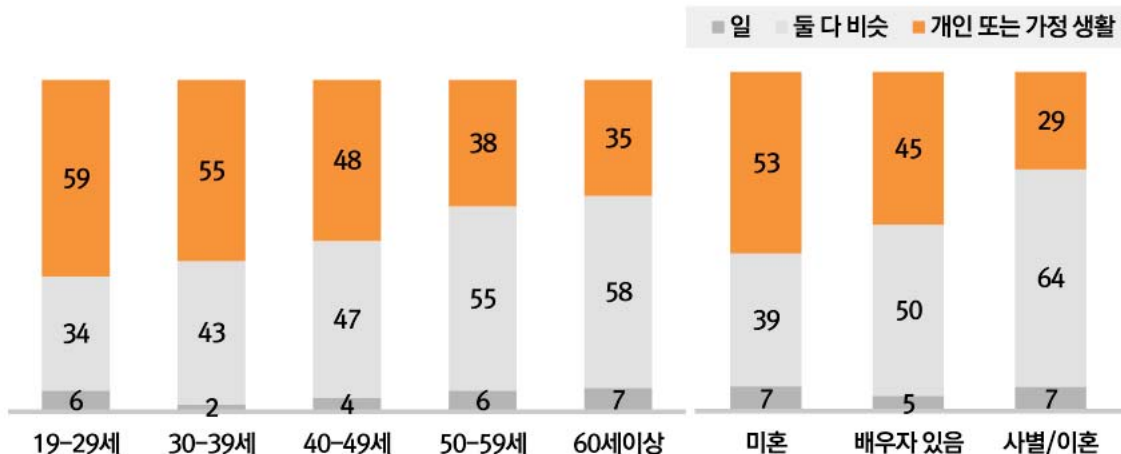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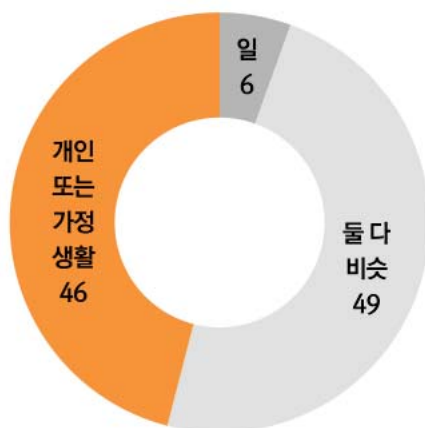
**일보다는 내 삶이 더 중요
2030, 미혼자에서
개인의 삶 중시 경향이 뚜렷**

'일'과 '개인 또는 가정 생활'에 대해 둘 다 비슷하게 더 중요하다 49%, 개인 또는 가정 생활이 더 중요하다 46%, 일이 더 중요하다 6%로, 일과 개인의 삶을 모두 중시하는 비율이 가장 높으며, 일과 삶 중에서는 자신의 삶을 더 중시하는 비율이 높았다.

특히 연령대가 낮을 수록 일보다는 개인의 삶을 중시하는 경향이 뚜렷한데 20대(59%)와 30대(55%)에서 개인 또는 가정 생활이 더 중요하다는 응답은 과반을 상회했다. 또한 미혼자가 기혼자에 비해 개인의 삶을 더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Q 귀하는 일과 개인 또는 가정 생활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N=1,000, %)



일하는 시간은 과다 나/가족을 위한 시간은 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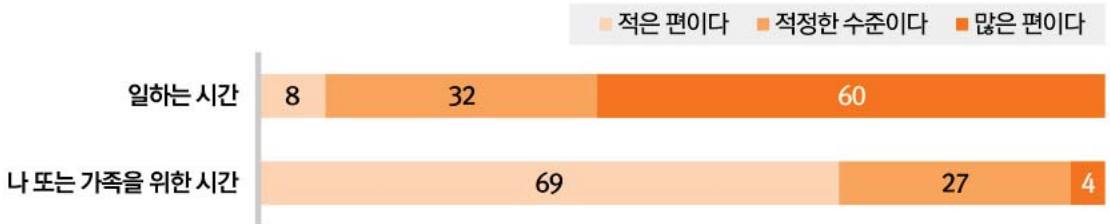
우리사회의 일하는 시간에 대해 많다는 인식이 60%인 반면, 나 또는 가족을 위한 시간에 대해서는 적다는 인식이 69%였다.

20·30·40대에서 일하는 시간이 많다는 응답이 50대 이상 연령대보다 더 높았다. 나 또는 가족을 위한 시간이 적다는 응답도 40대 이하 연령층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았으며, 특히 한창 결혼과 육아에 집중해야 하는 30대에서 나 또는 가족을 위한 시간이 적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주당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취업자에서 일하는 시간이 많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고 특히 69시간 이상 일하는 취업자는 79%가 일하는 시간이 많다고 응답했다. 반면 초과 근로시간이 길수록 나 또는 가족을 위한 시간은 적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높았다.

Q 우리사회에서 일하는 시간과 나 또는 가족을 위한 시간이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N=1,000, %)



(단위: %)

Base=전체	사례수 (명)	일하는 시간				나 또는 가족을 위한 시간			
		적은 편이다	적당한 수준이다	많은 편이다	계	적은 편이다	적당한 수준이다	많은 편이다	계
■ 전체 ■	(1,000)	8	32	60	100	69	27	4	100
연령									
19~29세	(175)	2	29	68	100	71	24	5	100
30~39세	(173)	10	25	65	100	78	17	5	100
40~49세	(203)	4	26	70	100	71	25	4	100
50~59세	(201)	10	39	51	100	67	31	2	100
60세이상	(248)	12	38	50	100	60	36	4	100
주당 근로시간									
40시간 미만	(122)	10	36	55	100	64	30	6	100
40시간	(135)	8	51	41	100	52	45	3	100
41~52시간	(212)	7	30	63	100	78	19	3	100
53~68시간	(134)	7	27	66	100	74	23	3	100
69시간 이상	(48)	4	16	79	100	87	10	2	100
미취업자	(349)	8	29	62	100	66	29	5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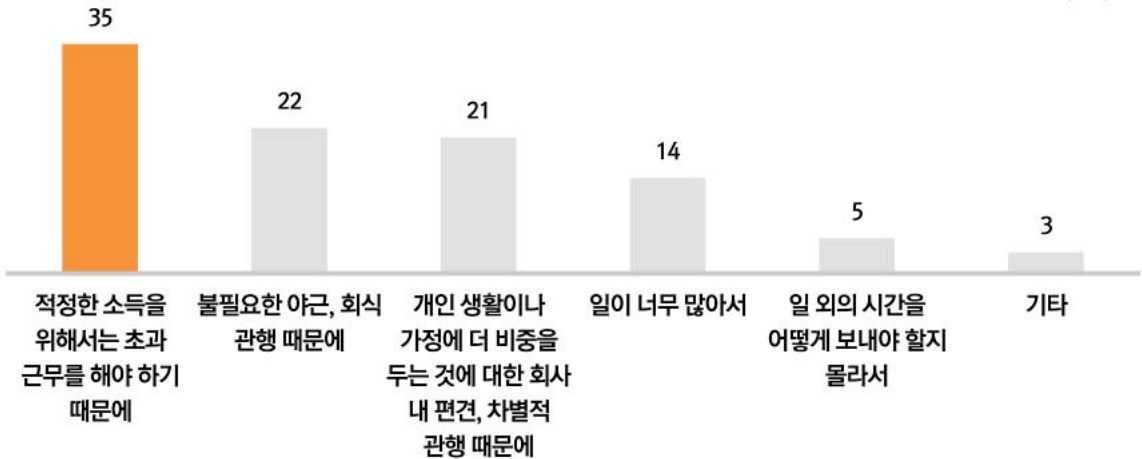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기 어려운 이유, 적정 소득을 위해서는 초과 근무를 해야 하므로

우리사회가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기 어려운 이유는 적정 소득을 위해 초과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 35%, 불필요한 야근이나 회식 관행 22%, 개인이나 가정에 더 비중을 두는 것에 대한 회사 내 편견과 차별적 관행 21% 순이었다.

단, 워라벨을 이루기 어려운 이유를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차이가 있다. 20대와 미혼자는 불필요한 야근이나 회식 관행(43%)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고 주당 40시간 근로자는 개인이나 가정에 비중을 두는 것에 대한 회사의 편견과 차별적 관행(33%)을 가장 많이 꼽았다. 한편 69시간 이상 취업자는 무려 62%가 소득을 위해 초과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으로 응답하였다. 소득 수준에 따른 응답의 차이는 특별히 나타나지는 않았다.

Q 우리사회에서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기 어려운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N=1,000, %)



(단위: %)

Base=전체	사례수 (명)	적정한 소득을 위해서는 초과 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야근, 회식 관행 때문에	개인 생활이나 가정에 더 비중을 두는 것에 대한 회사 내 편견, 차별적 관행 때문에	일이 너무 많아서	일 외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몰라서	기타	계
□ 전체 □	(1,000)	35	22	21	14	5	3	100.0
연령								
19~29세	(175)	18	43	16	15	5	2	100.0
30~39세	(173)	33	20	19	19	3	5	100.0
40~49세	(203)	40	18	21	16	3	3	100.0
50~59세	(201)	44	14	22	13	5	2	100.0
60세이상	(248)	36	18	23	10	8	4	100.0
혼인상태								
미혼	(274)	22	34	16	18	7	3	100.0
배우자 있음	(644)	40	17	22	13	5	3	100.0
사별/이혼	(82)	35	22	23	13	4	4	100.0
주당 근로시간								
40시간 미만	(122)	35	14	25	18	3	5	100.0
40시간	(135)	29	15	33	8	8	7	100.0
41~52시간	(212)	37	18	18	19	5	3	100.0
53~68시간	(134)	49	15	15	16	2	2	100.0
69시간 이상	(48)	62	8	8	19	2	0	100.0
미취업자	(349)	26	34	19	11	7	2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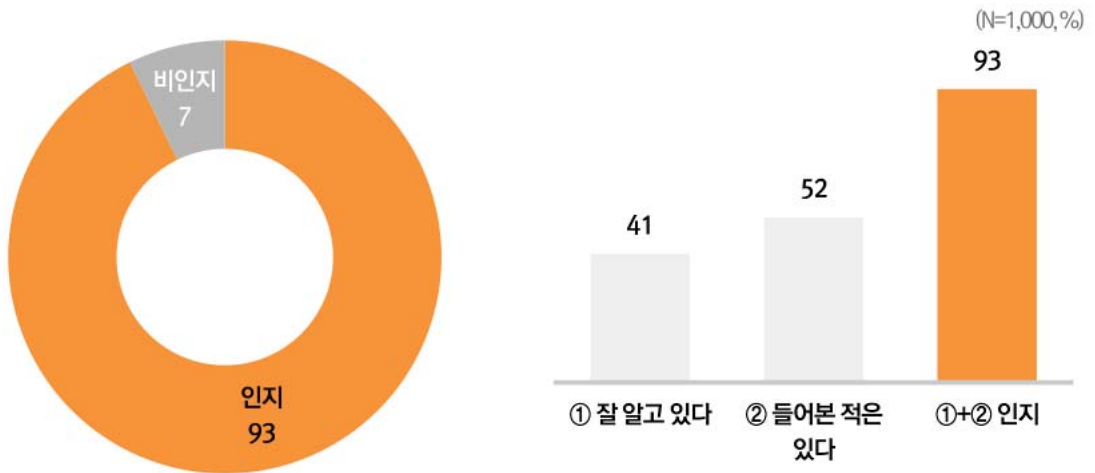
**근로시간 단축 시행
들어봤다 97%
찬성한다 57%**

올해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되는 근로시간 52시간 단축 시행에 대해 국민 10명 중 9명은 들어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시간 단축 시행에 대해 찬성 57%, 반대 27%, 모름 16%로 찬성 의견이 과반을 상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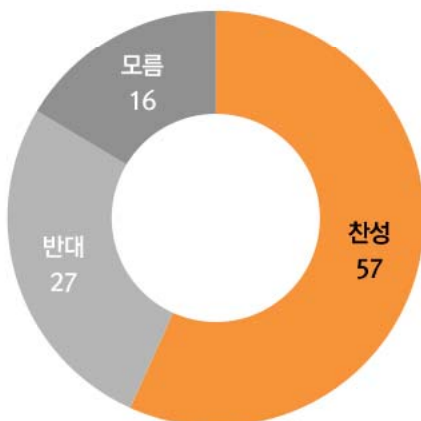
근로시간 단축에 반대하는 응답자는 그 이유로 임금 감소(55%)를 가장 많이 꼽았다.

Q 올해 7월부터 주당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제한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됩니다. 귀하는 근로시간 단축 시행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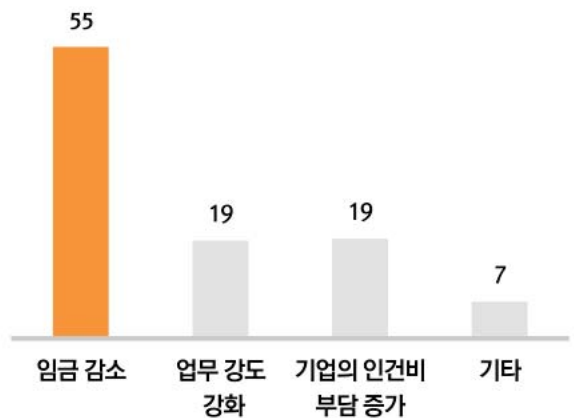
Q 귀하는 다음과 같은 근로시간 단축 시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N=1,000, %)



Q (근로시간 단축 시행 반대 응답)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N=1,000, %)



근로시간 단축 2030, 미혼자에서 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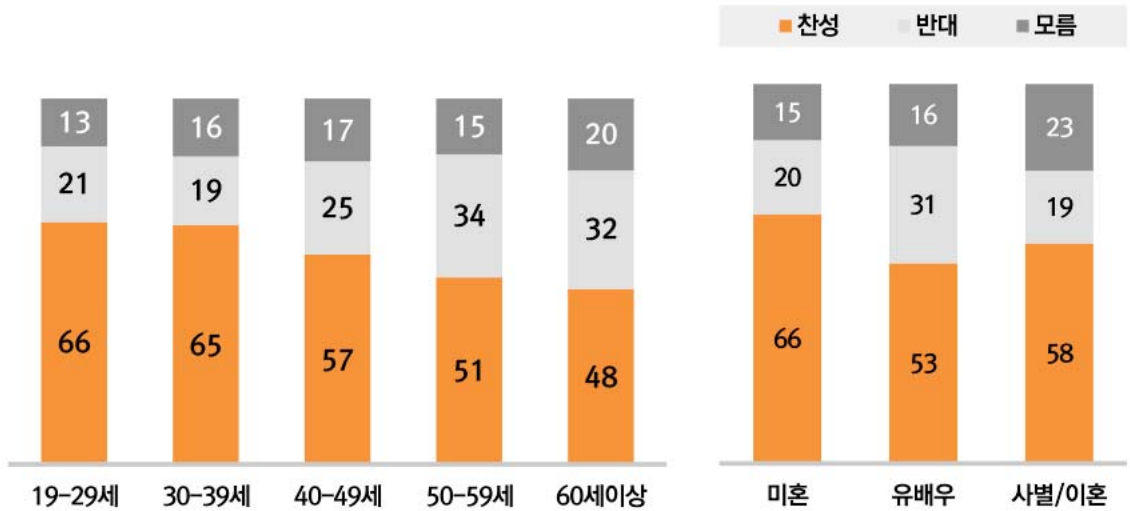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의견은 연령대가 낮을수록, 미혼자에서 찬성 의견이 높았다. 이러한 경향성은 앞서 젊은층, 미혼자에서 일보다는 개인 삶을 우선했던 결과와 비슷하다. 2030의 미혼에서 워라벨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정규직은 높은 지지 비임금은 절반의 찬성

고용형태별로는 정규직근로자(62%)가 비정규직(57%) 보다 찬성 의견이 높았고 비임금근로자 (50%)에서 찬성 의견이 가장 낮았다. 비임금근로자는 제도 시행 시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집단이다.

Q 근로시간 단축 시행에 대한 응답자 특성별 결과(전체)

(N=1,000, %)



Q 근로시간 단축 시행에 대한 고용형태별 결과(취업자)

(N=652, %)



주당 53-68시간 근로자 근로시간 단축 찬성 절반 못 미쳐 임금 하락 우려 때문

주당 평균 근로시간에 따른 의견 차이를 보면 53-68시간 근로자에서 찬성 의견이 47%로 가장 낮았다. 53-68시간은 근로시간 한도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제한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구간이다. 즉 법 시행 시 주당 53-68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을 지금보다 줄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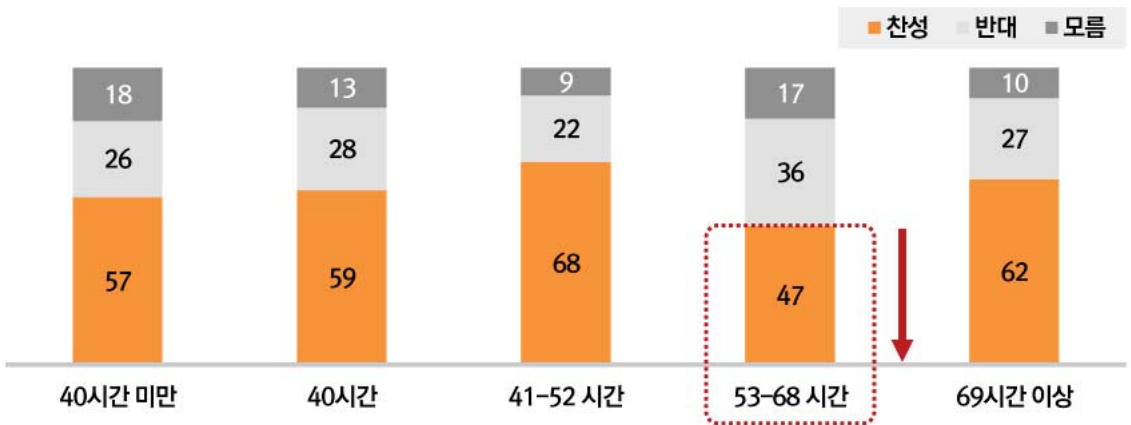
이 집단은 근로시간 단축 시 임금 하락의 우려가 가장 큰 집단이기도 하다. 제도 시행에 반대하는 임금근로자 중, 주53-68시간 근로자 76%가 임금 하락을 그 이유로 꼽았다.

똑같이 근로시간 제한 52시간 범위를 초과하고 있음에도 주 69시간 이상 근로자의 경우 찬성 의견이 62%로 높다. 임금 하락에 대한 우려는 가장 낮은 수준이다. 현행 근로기준법 하에서도 근로시간 68시간 제한을 적용받지 못하는 집단이기 때문이다.

한편 주당 41-52시간 근로자에서 찬성 의견이 68%로 가장 높았다. 이 집단의 근로자에게 개정 법은 근로시간이 더 늘어나는 것을 막아주는 근거가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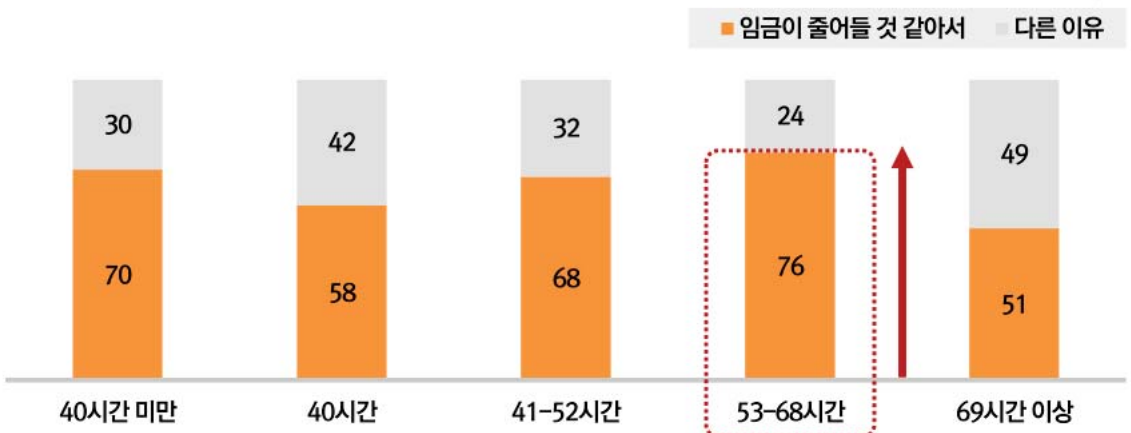
Q 근로시간 단축 시행에 대한 입장(임금근로자)

(N=491, %)



Q (근로시간 단축 시행 반대 응답) 반대하는 이유(임금근로자)

(N=132, %)



급여 감소에 대한 우려가 큰 가운데 개인 및 가족과의 시간 증가에 대한 기대감도 공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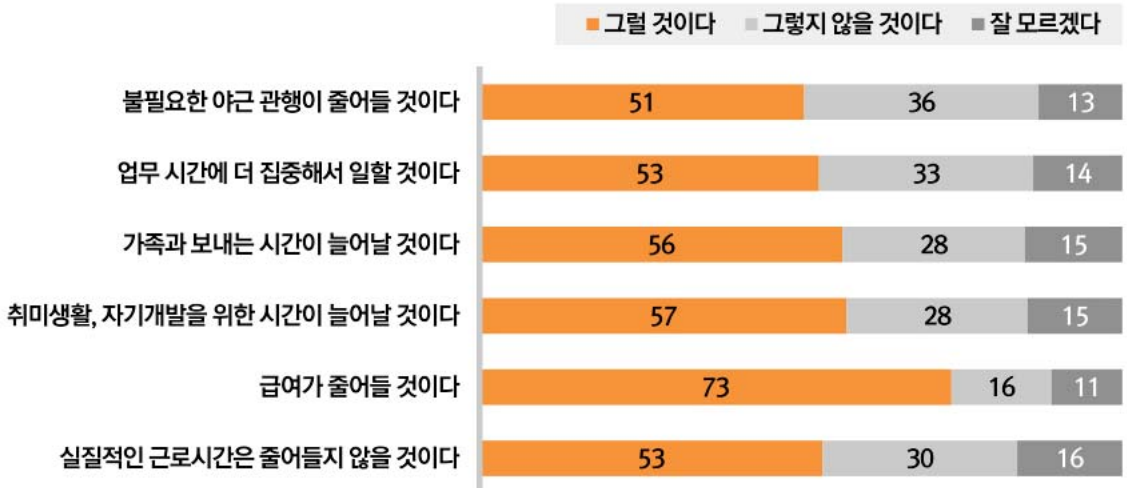
근로시간 단축 시행이 가져올 변화 중 급여가 줄어든 것에 대한 우려가 73%로 가장 높았다. 특히 블루칼라 직종(생산/기능/노무직 80%, 판매/영업/서비스 78%)에서 급여가 감소할 것이라는 응답이 높았다.

근로시간 단축이 가져올 긍정적 변화로는 취미생활, 자기개발을 위한 시간 증가(57%), 가족과 보내는 시간 증가(56%)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어서 업무 집중력 향상 53%, 불필요한 야근 관행 감소 51% 순이었다.

한편 실질적 근로시간은 줄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도 53%나 되었다.

Q 근로시간 단축법이 시행된 후 일어날 수 있는 변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N=1,000, %)



Q 근로시간 단축법이 시행된 후 일어날 수 있는 변화: 급여가 줄어든 것이다

(단위: %)

Base=전체	사례수 (명)	그럴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것이다	잘 모르겠다	계
■ 전체 ■	(1,000)	73	16	11	100
직업					
농/임/어업	(17)	71	23	6	100
자영업	(121)	73	20	7	100
판매/영업/서비스	(78)	77	22	1	100
생산/기능/노무	(169)	80	11	10	100
사무/관리/전문	(187)	67	21	12	100
주부	(219)	74	13	14	100
학생	(75)	73	7	20	100
무직/퇴직/기타	(135)	72	16	12	100

지금보다 덜 일하고 덜 벌겠다 15%에 불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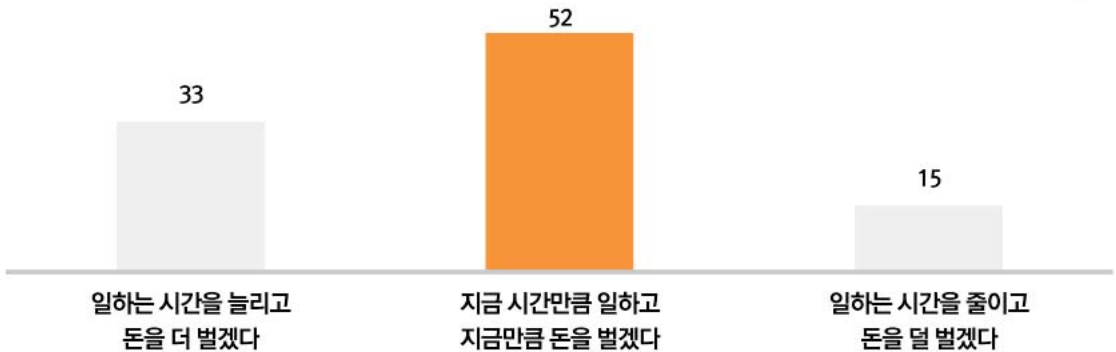
현재의 근로시간과 수입을 고려할 때, 취업자의 52%는 지금 시간만큼 일하고 지금만큼 돈을 벌겠다고 응답했고, 33%는 일하는 시간을 늘리고 돈을 더 벌겠다고 응답했다.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돈을 덜 벌겠다는 취업자는 15%에 불과했다.

대부분 현재의 근로시간과 급여를 유지하겠다는 응답이 더 높았지만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취업자는 일하는 시간을 늘리고 돈을 더 벌겠다는 응답(47%)이 현재 유지보다 더 높았다.

한편 주당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취업자는 일하는 시간을 늘리고 돈을 더 벌겠다는 응답(38%)이 다른 응답자보다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근로시간 69시간 이상 취업자에서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돈을 덜 벌겠다(29%)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Q (취업자만) 귀하의 일하는 시간과 수입을 고려할 때, 다음의 세 가지가 가능하다면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N=651, %)



(단위: %)

Base=전체	사례수 (명)	일하는 시간을 늘리고 돈을 더 벌겠다	지금 시간만큼 일하고 지금만큼 돈을 벌겠다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돈을 덜 벌겠다	계
■ 전체 ■	(651)	33	52	15	100
월평균소득					
200만원미만	(102)	47	43	10	100
200~300만원	(136)	35	47	19	100
300~400만원	(124)	31	55	15	100
400~500만원	(102)	29	61	10	100
500~600만원	(76)	31	54	14	100
600~700만원	(47)	26	60	15	100
700만원이상	(65)	25	54	21	100
주당 근로시간					
40시간 미만	(122)	38	49	13	100
40시간	(135)	32	59	9	100
41~52시간	(212)	33	55	12	100
53~68시간	(134)	31	48	21	100
69시간 이상	(48)	29	41	29	100

담당자 김보미 과장

전화 | 02-3014-1056

e-mail | kimbm@hrc.co.kr

여론속의
여輿論論

CHAPTER

1-2

현안조사
가족에 대한 인식

01

현안조사 : 가족에 대한 인식

국민 2명 중 1명
결혼 반드시 할 필요 없어

결혼은 반드시 해야한다에 대해 그렇다 54%, 그렇지 않다 46%로 결혼을 반드시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응답이 과반에 가까웠다. 결혼은 반드시 해야한다는 응답은 연령이 높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남성(68%), 기혼(62%)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자녀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에 대해 그렇다 63%, 그렇지 않다 37%로 국민 10명 중 6명은 자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응답해 과거*에 비해 '자녀는 필수'라는 인식이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녀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응답은 연령이 높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남성(72%), 기혼(72%)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Q 다음은 결혼과 자녀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음의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N=1,000, %)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단위: %)

Base=전체		사례수(명)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		자녀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계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 전체 ▣		(1000)	54	46	63	37	100
성별							
	남자	(497)	68	32	72	28	100
	여자	(503)	41	59	54	46	100
연령							
	19~29세	(175)	37	63	37	63	100
	30~39세	(173)	44	56	54	46	100
	40~49세	(203)	45	55	61	39	100
	50~59세	(201)	60	40	73	27	100
	60세이상	(248)	76	24	81	19	100
혼인상태							
	미혼	(274)	35	65	41	59	100
	배우자 있음	(644)	62	38	72	28	100
	사별/이혼	(82)	55	45	66	34	100

* 참고 : 2013년 79.9%, 2016년 71.3%로 점차 낮아지는 추세임(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

결혼과 자녀가 사회적 성취의 걸림돌이 된다는 응답, '여성, 20대, 미혼, 주부'에서 상대적으로 높아

결혼을 하면 사회적 성취를 이루기 어려운지에 대해 그렇지 않다 53%, 그렇다 47%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높았다. 질문에 대한 응답의 성별격차가 컸는데 여성의 64%가 결혼이 사회적 성취의 걸림돌이 된다고 응답한 반면, 남성은 그렇다는 응답이 30%에 불과하여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그 외, 연령이 낮을수록, 미혼과 사별/이혼에서, 주부 집단에서 결혼을 하면 사회적 성취를 이루기 어렵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자녀에 대한 질문에서도 동일한 경향을 보였다

Q 다음은 결혼과 자녀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음의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N=1,000, %)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단위: %)

Base=전체	사례수(명)	결혼을 하면 나의 사회적 성취를 이루기 어렵다		자녀를 가지면 나의 사회적 성취를 이루기 어렵다		계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 전체 □	(1000)	47	53	40	60	100
성별						
남자	(497)	30	70	24	76	100
여자	(503)	64	36	55	45	100
연령						
19-29세	(175)	59	41	60	40	100
30-39세	(173)	56	44	53	47	100
40-49세	(203)	46	54	41	59	100
50-59세	(201)	41	59	23	77	100
60세이상	(248)	38	62	30	70	100
혼인상태						
미혼	(274)	53	47	54	46	100
배우자 있음	(644)	44	56	35	65	100
사별/이혼	(82)	51	49	34	66	100
직업						
농/임/어업	(17)	29	71	23	77	100
자영업	(121)	38	62	30	70	100
판매/영업/서비스	(78)	53	47	42	58	100
생산/기능/노무	(169)	36	64	27	73	100
사무/관리/전문	(187)	45	55	45	55	100
주부	(219)	65	35	53	47	100
학생	(75)	51	49	50	50	100
무직/퇴직/기타	(135)	40	60	32	68	100

**결혼을 전제하지 않은
동거나출산, 양육이 가능하다,
'남성, 저연령층'에서 높아**

**아이가 있어도 부부간 갈등이
있으면 이혼할 수 있다,
'여성, 저연령층'에서 높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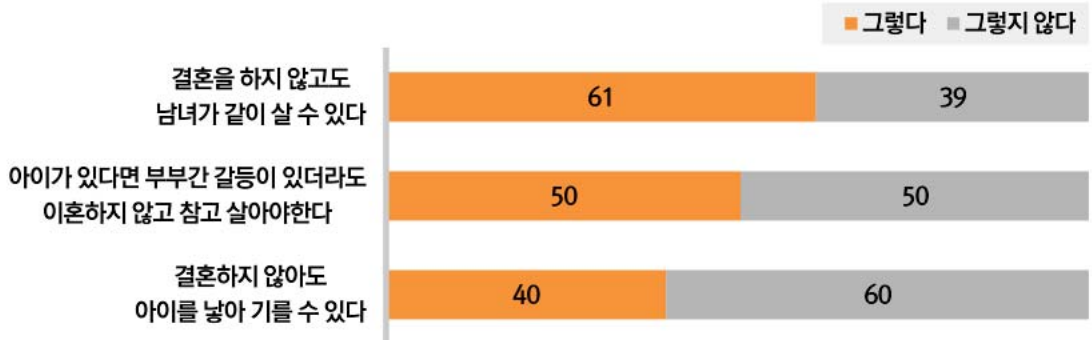
결혼을 하지 않고도 남녀가 같이 살 수 있다에 대해 그렇다 61%, 그렇지 않다 39%로 그렇다는 응답이 더 높았다. 아이가 있다면 부부간 갈등이 있더라도 이혼하지 않고 참고 살아야 한다에 대해서는 그렇다 50%, 그렇지 않다 50%로 비슷했다. 결혼하지 않아도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다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60%, 그렇다 40%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더 높았다.

결혼에 대한 인식을 묻는 세가지 항목 모두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연령별로는 '결혼을 하지 않고도 남녀가 같이 살 수 있다'와 '결혼하지 않아도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다'는 항목에 동의하는 응답은 연령이 낮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아이가 있다면 부부간 갈등이 있더라도 이혼하지 않고 참고 살아야 한다'는 항목에 동의하는 응답은 연령이 높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였다.

종합적으로 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결혼을 전제하지 않은 동거나 출산, 양육에 대해서는 개방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이혼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태도를 보였다. 반면, 여성은 결혼을 전제하지 않은 동거나 출산, 양육에 대해서는 다소 보수적이었으나, 이혼에 대해서는 개방적인 태도를 보여 성별 인식 차이를 보였다. 또한 저연령층일수록 이혼을 하는 것과 결혼을 전제하지 않은 동거나 출산, 양육에 개방적인 태도를 보여 연령별 차이가 있었다.

Q 결혼에 대한 다음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N=1,000, %)



(단위: %)

Base=전체	사례수 (명)	결혼을 하지 않고도 남녀가 같이 살 수 있다		아이가 있다면 부부간 갈등이 있더라도 이혼하지 않고 참고 살아야 한다		결혼하지 않아도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다		계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 전체 □	(1000)	61	39	50	50	40	60	100
성별								
남자	(497)	63	37	60	40	43	57	100
여자	(503)	59	41	41	59	37	63	100
연령								
19-29세	(175)	81	19	36	64	46	54	100
30-39세	(173)	76	24	42	58	45	55	100
40-49세	(203)	70	30	45	55	46	54	100
50-59세	(201)	51	49	52	48	33	67	100
60세이상	(248)	38	62	69	31	33	67	100

**딸이 하나는
있어야 한다는 의견,
아들 하나는
있어야 한다는 의견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높아**

자녀는 하나인 것보다 둘 이상이 낫다에 대해 그렇다는 응답이 73%로 높게 응답되었다. 딸이 하나는 있어야 한다에 대해 그렇다는 응답은 44%인 반면, 아들이 하나는 있어야 한다에 대해 그렇다는 응답은 23%에 불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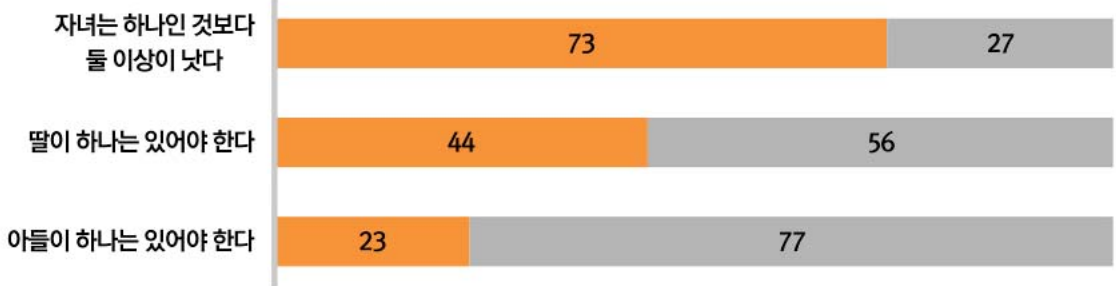
성별차이를 보면, 자녀는 하나인 것보다 둘 이상이 낫다는 의견과 아들이 하나는 있어야 한다는 의견은 남성이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딸이 하나는 있어야 한다는 의견에는 성별 차이가 거의 없었다.

다자녀에 대한 선호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높았고, 자녀가 2명 이상인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응답됐다. 아들에 대한 선호는 20대와 60세 이상, 자녀 3명 이상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딸에 대한 선호는 60세 이상, 자녀 2명인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Q 자녀에 대한 다음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N=1,000, %)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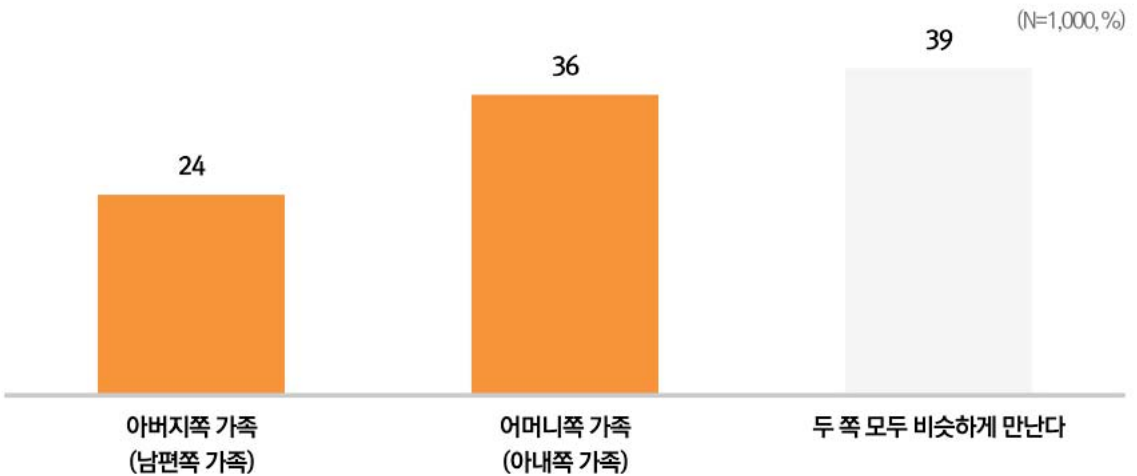
Base=전체	사례수 (명)	자녀는 하나인 것보다 둘 이상이 낫다		아들이 하나는 있어야 한다		딸이 하나는 있어야 한다		계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 전체 ■	(1,000)	73	27	23	77	44	56	100
성별								
남자	(497)	79	21	28	72	45	55	100
여자	(503)	67	33	19	81	44	56	100
연령								
19~29세	(175)	58	42	29	71	42	58	100
30~39세	(173)	67	33	18	82	44	56	100
40~49세	(203)	72	28	20	80	42	58	100
50~59세	(201)	78	22	22	78	43	57	100
60세이상	(248)	84	16	27	73	50	50	100
자녀수								
자녀없음	(322)	61	39	25	75	42	58	100
1명	(170)	69	31	18	82	39	61	100
2명	(394)	83	17	22	78	49	51	100
3명 이상	(114)	81	19	33	67	44	56	100

부계 쪽보다 모계 쪽이 더 가까워

부계 쪽과 모계 쪽 중 어느 쪽 가족과 더 자주 만나는지에 대해 두 쪽 모두 비슷하게 만난다가 39%로 가장 높고, 모계 쪽 36%, 부계 쪽 24% 순으로 응답됐다.

전 연령대에서 부계 쪽보다는 모계 쪽을 더 자주 만난다는 응답이 높았고, 연령대별로 보면 20대에서 모계 쪽과 자주 만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러한 모계 쪽 친밀성은 외가 중심의 자녀양육 환경, 여성의 지위 향상, 여성의 시댁과의 관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Q 다음 중 어느 쪽 가족과 더 자주 만나시나요? 미혼이신 분들은 부모님을 기준으로 아버지쪽 가족/어머니쪽 가족을 생각하여 응답해주시고, 기혼이신 분들은 본인을 기준으로 남편쪽 가족/아내쪽 가족을 생각하고 응답해주세요.



Base=전체	사례수 (명)	아버지쪽 가족 (남편쪽 가족)	어머니쪽 가족 (아내쪽 가족)	두 쪽 모두 비슷하게 만난다	계
▣ 전체 ▣	(1,000)	24	36	39	100
연령					
19-29세	(175)	21	39	40	100
30-39세	(173)	30	37	33	100
40-49세	(203)	26	33	41	100
50-59세	(201)	27	36	37	100
60세이상	(248)	19	36	45	100

국민 10명 중 7명 외국인과의 결혼 찬성

국민 10명 중 6명 입양 찬성

내 자녀가 외국인과의 결혼한다고 할 경우 찬성한다는 의견이 76%, 반대한다는 의견이 24%로 찬성하는 의견이 더 높았다. 찬성한다는 의견은 20~40대의 젊은 연령층과 미혼(81%)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50대~60대의 고연령층에서는 상대적으로 반대여론이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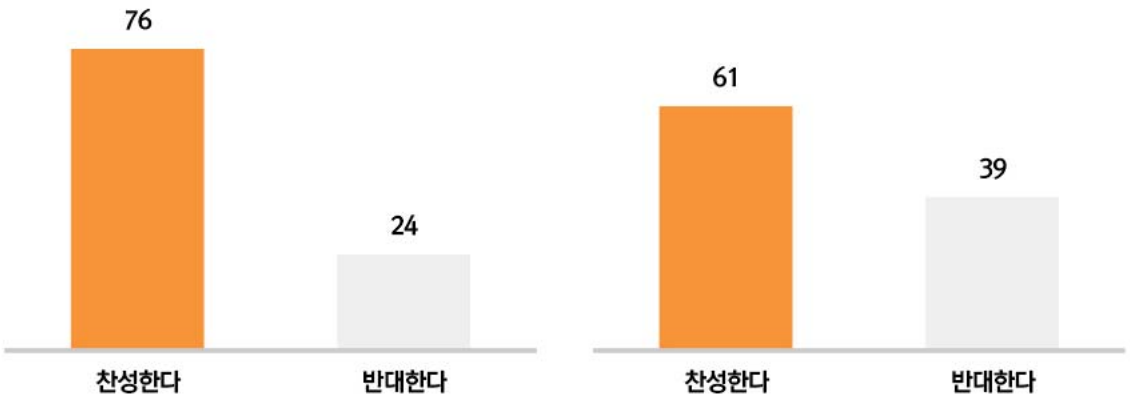
자녀가 입양을 한다면 찬성하겠다는 응답이 61%, 반대한다는 응답이 39%로 찬성한다는 응답이 높았다. 찬성한다는 의견은 20대와 60세 이상, 미혼(67%)과 사별/이혼(66%)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반대한다는 의견은 30대~50대, 기혼(42%)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Q 만일 자녀가 외국인과의 결혼한다면 찬성하시겠습니까, 반대하시겠습니까?
만일 자녀가 입양을 한다면 찬성하시겠습니까, 반대하시겠습니까

자녀의 외국인과의 결혼

자녀가 입양할 경우

(N=1,000, %)



(N=1,000, %)

Base=전체	사례수 (명)	자녀의 외국인과의 결혼 찬반여부		자녀가 입양할 경우 찬반여부		계
		찬성한다	반대한다	찬성한다	반대한다	
■ 전체 ■	(1,000)	76	24	61	39	100
연령						
19~29세	(175)	83	17	68	32	100
30~39세	(173)	79	21	59	41	100
40~49세	(203)	81	19	56	44	100
50~59세	(201)	68	32	60	40	100
60세이상	(248)	71	29	64	36	100
혼인상태						
미혼	(274)	81	19	67	33	100
배우자 있음	(644)	74	26	58	42	100
사별/이혼	(82)	70	30	66	34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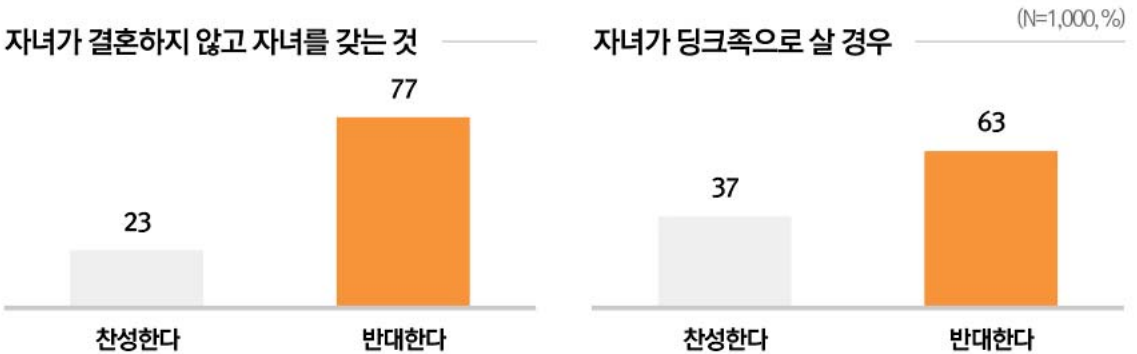
결혼하지 않고 자녀를 갖는 것과 딩크족으로 사는 것에 대한 찬성 비율 세대별 차이 뚜렷

자녀가 결혼을 하지 않고 자녀를 갖는다고 하는 것에 대해 찬성이 23%, 반대가 77%로 나와 결혼하지 않고 자녀를 갖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거부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한다는 응답은 남자(28%), 20대(32%), 미혼(31%) 및 사별/이혼(32%)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자녀가 결혼 후 의도적으로 자녀를 낳지 않고 딩크족으로 사는 것에 대해 찬성이 37%, 반대가 63%였다. 찬성한다는 응답은 여자(43%), 20대(75%), 미혼(65%)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특히 결혼을 하지 않고 자녀를 낳는 것과 결혼 후에도 자녀없이 딩크족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는 연령차이가 크게 나타나 세대별 인식의 차이가 두드러졌다.

Q 만일 자녀가 결혼을 하지 않고 자녀를 가진다면 찬성하시겠습니까, 반대하시겠습니까?
만일 자녀가 결혼 후 의도적으로 자녀를 낳지 않는다면 찬성하시겠습니까, 반대하시겠습니까?



(단위: %)

Base=전체	사례수 (명)	자녀가 결혼하지 않고 자녀를 갖는 것에 대한 찬반여부		자녀가 딩크족으로 살 경우 찬반여부		계
		찬성한다	반대한다	찬성한다	반대한다	
■ 전체 ■	(1,000)	23	77	37	63	100
성별						
남자	(497)	28	72	31	69	100
여자	(503)	19	81	43	57	100
연령						
19-29세	(175)	32	68	75	25	100
30-39세	(173)	22	78	54	46	100
40-49세	(203)	25	75	33	67	100
50-59세	(201)	21	79	22	78	100
60세이상	(248)	19	81	12	88	100
혼인상태						
미혼	(274)	31	69	65	35	100
배우자 있음	(644)	19	81	25	75	100
사별/이혼	(82)	32	68	33	67	100

담당자 유승아 과장

전화 | 02-3014-0000

e-mail | 000@hrc.co.kr

여론 속의
여輿論論

CHAPTER

02

국정지표

02

국정지표

1) 대통령 국정운영평가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평가
지난 달과 큰 차이 없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73%는 잘하고 있다고 한 반면, 20%는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평가 비율은 지난달 대비 1%포인트(74% → 73%) 소폭 하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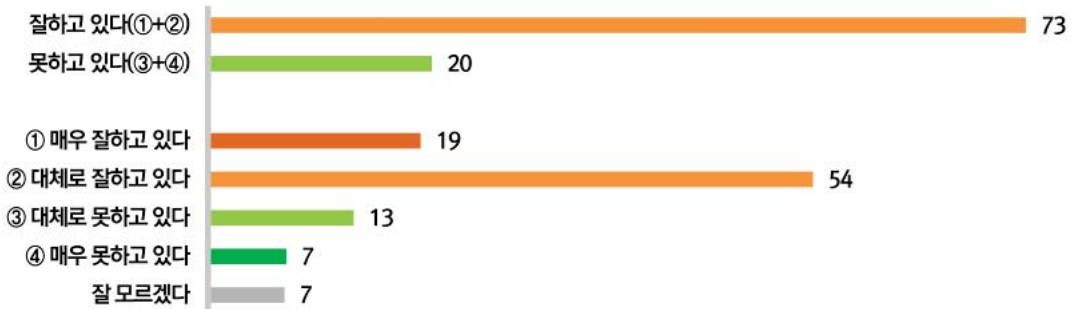
연령대별로는 20대 78%, 30대 87%, 40대 82%, 50대 70%, 60세 이상 56%이며, 2030세대에서는 상승한 반면, 40대 이상에서는 하락하였다.

지역별로는 서울 69%, 인천/경기 77%, 대전/세종/충청 73%, 광주/전라 87%, 대구/경북 60%, 부산/울산/경남 71%이며, 지난달 대비 서울에서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 93%, 중도 73%, 보수 48%로 지난달 대비 보수에서 약간 하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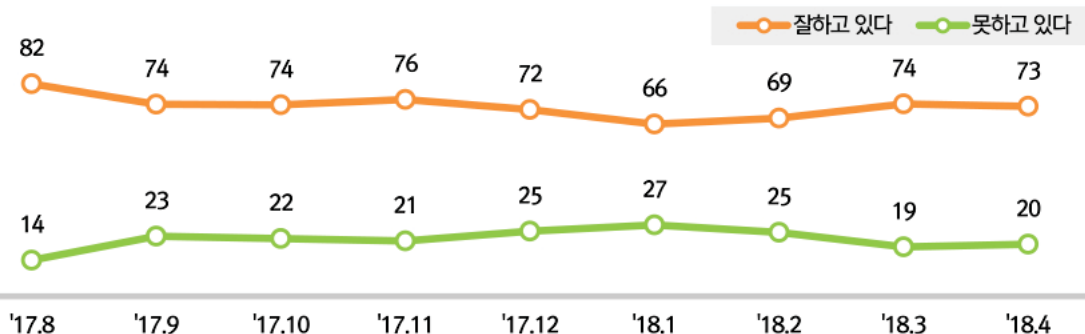
잘하고 있다 73%, 못하고 있다 20%

(N=1,000, %)



지난달 대비 1%포인트 소폭 하락

(N=1,000, %)



연령대, 거주지역, 이념성향별 국정운영 긍정평가 추이

지난달 대비 2030세대에서는 상승한 반면, 40대 이상에서는 하락

(N=1,000, %, %p)

	'17.8	'17.9	'17.10	'17.11	'17.12	'18.1	'18.2	'18.3	'18.4	전월 대비
전체	82	74	74	76	72	66	69	74	73	-1
19-29세	88	86	83	87	85	67	74	73	78	+5
30-39세	90	89	85	86	92	77	81	81	87	+6
40-49세	90	85	82	89	75	78	77	88	82	-6
50-59세	78	64	71	70	69	66	71	76	70	-6
60세 이상	68	54	54	54	47	48	47	58	56	-2

지난달 대비 서울에서 하락폭 가장 커

(N=1,000, %, %p)

	'17.8	'17.9	'17.10	'17.11	'17.12	'18.1	'18.2	'18.3	'18.4	전월 대비
전체	82	74	74	76	72	66	69	74	73	-1
서울	80	73	69	77	68	60	68	74	69	-5
인천/경기	84	76	78	77	74	68	71	76	77	+1
대전/세종/충청	82	77	71	73	81	72	66	73	73	0
광주/전라	91	91	82	86	93	84	85	90	87	-3
대구/경북	72	61	62	65	57	60	62	59	60	+1
부산/울산/경남	82	70	75	76	64	62	59	71	71	0

지난달 대비 보수층에서 하락폭 가장 커

(N=1,000, %, %p)

	'17.8	'17.9	'17.10	'17.11	'17.12	'18.1	'18.2	'18.3	'18.4	전월 대비
전체	82	74	74	76	72	66	69	74	73	-1
진보	95	93	92	92	89	88	88	93	93	0
중도	81	77	75	79	75	70	73	74	73	-1
보수	65	50	50	52	51	41	47	51	48	-3

02

국정지표

2) 대통령 리더십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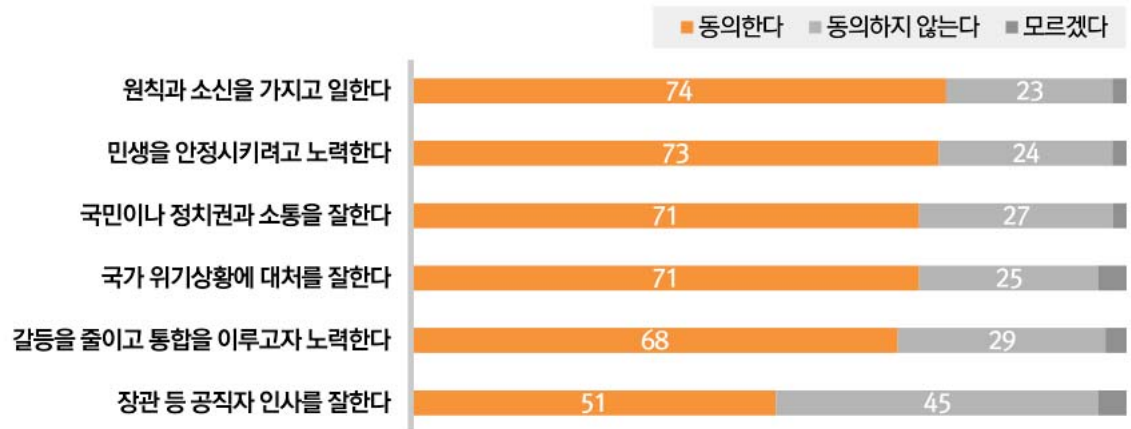
장관 등 공직자 인사 부문 하락폭 가장 커

대통령 리더십을 6가지 차원으로 각각 평가하게 한 결과, 원칙과 소신에 대한 긍정 평가가 7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민생 안정(73%), 소통(71%), 위기상황대처(71%), 통합노력(68%), 공직인사(51%) 순이었다.

리더십 차원별 평가 추이를 보면, 지난달 대비 공직인사 부문의 긍정평가 비율이 6%포인트(57% → 51%) 하락하였다.

원칙과 소신에 대한 평가 가장 높고, 공직 인사 평가 가장 낮아

(N=1,000, %)



지난달 대비 인사 부문 하락폭 가장 커

(N=1,000, 동의한다%, %p)

	'17.8	'17.9	'17.10	'17.11	'17.12	'18.1	'18.2	'18.3	'18.4	전월 대비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일한다	81	76	77	77	75	72	72	78	74	-4
민생을 안정시키려고 노력한다	84	79	76	78	75	73	69	71	73	+2
국민이나 정치권과 소통을 잘한다	81	72	75	72	72	69	68	72	71	-1
국가 위기상황에 대처를 잘한다	68	58	59	72	66	59	62	70	71	+1
갈등을 줄이고 통합을 이루고자 노력한다	75	69	68	67	65	62	62	66	68	+2
장관 등 공직자 인사를 잘한다	58	50	49	54	51	52	51	57	51	-6

02

국정지표
3) 국가 경제 인식

국가경제인식지수
-23
지난달 대비
4포인트 상승

국가경제에 대한 인식을 현재 상황 평가와 이후 전망으로 구분하여 측정한 뒤, 평가와 전망의 순 긍정 응답비율을 산술평균 하여 지수화(-100과 100사이의 값)하였으며, 이는 미국갤럽의 경제인식 인덱스(Gallup's U.S. Economic Confidence Index)를 참고하였다.

국가 경제 인식 지수는 -23으로 지난달(-27) 대비 4포인트 상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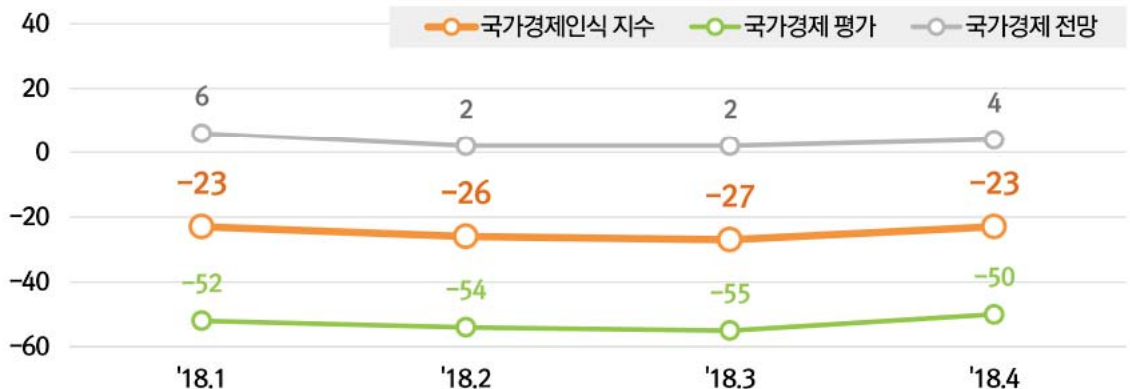
경제 인식 지수 산출 방식

(N=1,000)

우리나라 경제상황 평가	좋다 (a)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	나쁘다 (b)	모르겠다	계	좋다-나쁘다 (a-b)
	9%	32%	59%	1%	100%	-50(A)
우리나라 경제상황 전망	나아질 것이다(c)	지금과 비슷할 것이다	나빠질 것이다(d)	모르겠다	계	나아질 것- 나빠질 것 (c-d)
	32%	37%	28%	3%	100%	4(B)
국가경제인식(지수): A와 B의 평균						-23

국가경제 인식지수 지난달 대비 4포인트 상승

(N=1,000, 포인트)



연령대, 거주지역, 직업별 국가 '경제' 인식지수 추이

지난달 대비 40대에서만 하락

(N=1,000, 포인트)

	'18.1	'18.2	'18.3	'18.4	전월 대비
전체	-23	-26	-27	-23	+4
19-29세	-25	-16	-20	-16	+4
30-39세	-12	-20	-17	-8	+9
40-49세	-12	-13	-16	-23	-7
50-59세	-26	-29	-30	-30	0
60세 이상	-36	-46	-45	-34	+11

지난달 대비 광주/전라에서만 하락

(N=1,000, 포인트)

	'18.1	'18.2	'18.3	'18.4	전월 대비
전체	-23	-26	-27	-23	+4
서울	-25	-25	-28	-28	0
인천/경기	-25	-27	-22	-20	+2
대전/세종/충청	-22	-31	-23	-22	+1
광주/전라	-4	-7	2	-1	-3
대구/경북	-32	-31	-49	-38	+11
부산/울산/경남	-22	-31	-44	-27	+17

지난달 대비 생산/기능/노무직에서만 하락

(N=1,000, 포인트)

	'18.1	'18.2	'18.3	'18.4	전월 대비
전체	-23	-26	-27	-23	+4
자영업	-31	-35	-37	-41	-4
판매/영업/서비스	-24	-16	-23	-21	+2
생산/기능/노무	-13	-22	-12	-22	-10
사무/관리/전문	-19	-22	-15	-6	+9
주부	-32	-35	-31	-29	+2
학생	-10	-11	-30	-26	+4
무직/퇴직/기타	-19	-27	-35	-26	+9

02

국정지표

4) 국가 안보 인식

국가안보 인식지수
+29
지난달 대비
13포인트 상승

경제인식 인덱스와 동일한 방식으로 국가안보에 대한 인식을 현재 상황 평가와 이후 전망으로 구분하여 측정한 뒤, 평가와 전망의 순 긍정 응답비율을 산술평균 하여 지수화(-100과 100사이의 값)했다.

국가 안보 인식 지수는 +29로 지난달(+16) 대비 13포인트 상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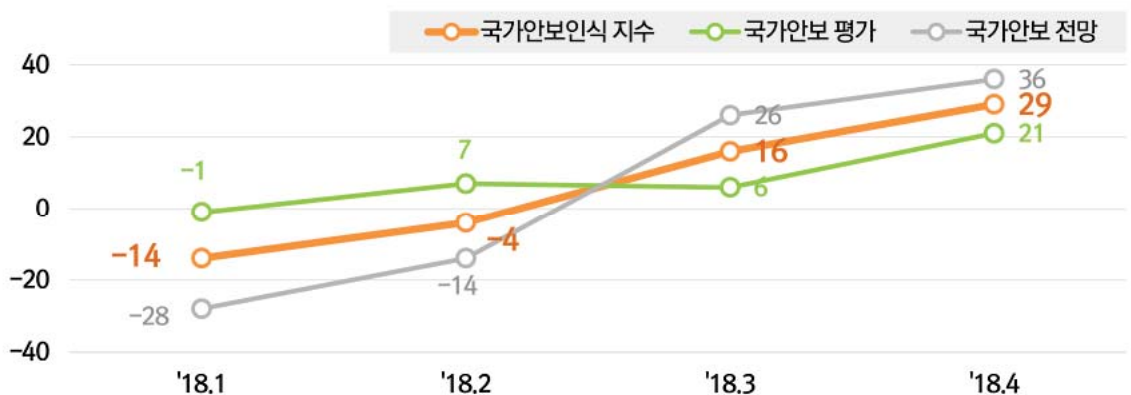
안보 인식 지수 산출 방식

(N=1,000)

우리나라 안보상황 평가	좋다 (a)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	나쁘다 (b)	모르겠다	계	좋다-나쁘다 (a-b)
	42%	35%	21%	2%	100%	+21(A)
우리나라 안보상황 전망	나아질 것이다(c)	지금과 비슷할 것이다	나빠질 것이다(d)	모르겠다	계	나아질 것- 나빠질 것 (c-d)
	50%	33%	14%	3%	100%	+36(B)
국가안보인식(지수): A와 B의 평균						+29

국가안보 인식지수 지난달 대비 13포인트 상승

(N=1,000, 포인트)



연령대, 거주지역, 이념성향별 국가 '안보' 인식지수 추이

지난달 대비 60세 이상에서 상승폭 가장 커

(N=1,000, 포인트)

	'18.1	'18.2	'18.3	'18.4	전월 대비
전체	-14	-4	+16	+29	+13
19-29세	-8	+10	+18	+35	+17
30-39세	+2	+9	+25	+35	+10
40-49세	+3	+10	+36	+36	0
50-59세	-18	-1	+18	+29	+11
60세 이상	-42	-37	-9	+15	+24

지난달 대비 대구/경북에서 상승폭 가장 커

(N=1,000, 포인트)

	'18.1	'18.2	'18.3	'18.4	전월 대비
전체	-14	-4	+16	+29	+13
서울	-24	-10	+15	+29	+14
인천/경기	-14	-3	+23	+35	+12
대전/세종/충청	-11	-13	+20	+24	+4
광주/전라	+8	+24	+42	+49	+7
대구/경북	-29	-5	-15	+8	+23
부산/울산/경남	-11	-9	+4	+23	+19

지난달 대비 진보, 중도, 보수층에서 모두 상승

(N=1,000, 포인트)

	'18.1	'18.2	'18.3	'18.4	전월 대비
전체	-14	-4	+16	+29	+13
진보	+16	+28	+51	+63	+12
중도	-10	-6	+11	+22	+11
보수	-52	-36	-20	-7	+13

02

국정지표
5) 주요 정책 진단

**중요도가 높은 정책은
긍정평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중요도가 낮은 정책은
긍정평가가 상대적으로
높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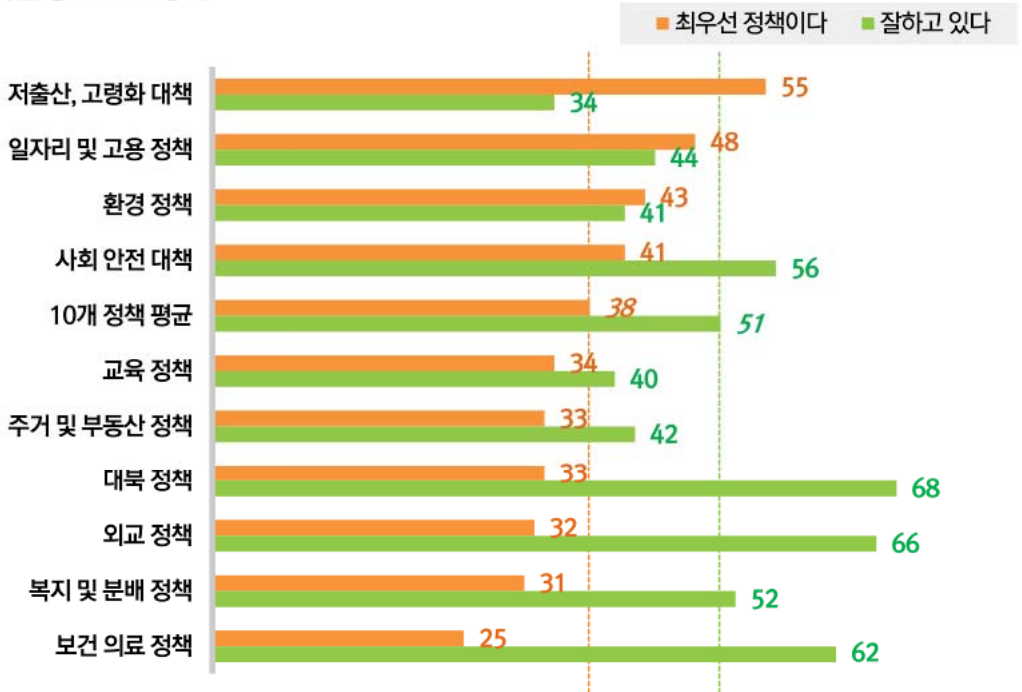
주요 10개 정책별로 정책의 중요성(최우선 정책인지 여부)과 실행에 대한 평가(잘하고 있는지 여부)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중요도가 가장 높은 정책은 ‘저출산, 고령화 대책’이었고, ‘일자리 및 고용 정책’, ‘환경 정책’, ‘사회안전 대책’ 등의 순이었다. 실행 평가가 가장 좋은 정책은 ‘대북 정책’이었고, ‘외교 정책’, ‘보건 의료 정책’, ‘사회 안전 대책’, ‘복지 및 분배 정책’ 등의 순이었다.

(평균 대비) 중요성이 높고 긍정평가도 높은 정책은 ‘사회 안전 대책’이 유일하였고, 중요성은 높지만 긍정평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정책은 ‘저출산, 고령화 대책’, ‘일자리 및 고용 정책’, ‘환경 정책’이었으며, 나머지 정책은 중요성은 낮지만 긍정평가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N=1,000, %)

10개 정책별 중요도 및 평가



담당자 오승호 차장

전화 | 02-3014-0167
e-mail | shoh@hrc.co.kr

여론속의
여輿論論

CHAPTER

03

조사개요

조사개요

구 분	내 용
모집단	• 전국의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표집틀	• 한국리서치 MS 패널(2017년 12월 기준 40만명)
표집방법	• 지역별, 성별, 연령별, 학력별, 직업별 기준 비례할당추출
표본크기	• 1,000명
표본오차	•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pm 3.1\%$
조사방법	• 웹조사(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
가중치 부여방식	• 지역별, 성별, 연령별 가중치 부여(림가중) (2018년 1월 행정자치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
응답율	• 메일 발송 8,113명, 조사참여 1,400명, 조사완료 1,000명 (발송자 대비 12.3%, 참여자 대비 71.4%, 유효 참여자 대비 84.4%)
조사일시	• 2018년 4월 18일~20일
조사기관	• (주)한국리서치(대표이사 노익상)

한국리서치 월간리포트

여론속의 여輿론論

40 YEARS Hankook Research

